

순천시 국비 ‘역대 최다’…남해안 중심 도시 ‘우뚛’

7천582억원 확보…전년比 560억 ↑

경전선 전철화 사업 예산 9배 증액

글로벌 문화산업 허브 조성 등 속도

순천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천58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도시의 지형도를 바꿀 획기적인 성장 동력을 장악했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7천58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올해 확보한 7천22억원보다 500억원(8%) 증가한 규모다.

이번 성과는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높아진 도시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시 공직자들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온 결과물이다. 예산 확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SOC(사회기반시설) 분야의 ‘폭발적 증액’이다. 광주와 부산을 잇는 남해안권 대동맥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 예산이 올해 190억원에서 내년 1천722억원으로 9배 가량 대폭 증액됐다. 해당 사업은 2조1천520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으로 경전선 전철화가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순천은 명실상부한 남해안 남중권의 교통·물류 중심지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라선 고속화(5억원), 순천 주암(3공구)-보성 벌교 국도 27호선 확장(805억원)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예산도 차질 없이 반영돼 교통 발달 요충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정원 도시’의 위상을 바다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도 본격화에 올랐다. 순천시가 5년여간 공을 들여온 ‘여자만 국가 해양생태공원(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련 국비 1천174억원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으며, 순천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육지(국가정원)와 바다(해양정원)에 모

두 국가정원을 보유한 독보적인 생태도시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했다. 미래 먹거리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힘이 실렸다. ‘K-디즈니 인제양성 거점기관 조성’ 사업에 2억5천만원(총사업비 300억원)이 신규 반영돼, 순천만국가정원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연계한 글로벌 문화산업 허브 조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 계속 사업으로는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46억원) ▲동천하구 습지 토지매입(60억원) ▲문화도시 조성사업(40억원) ▲갯벌치유 관광 플랫폼 조성(37억원) 등 생태와 문화를 아우르는 주요 현안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돼

중단 없는 시정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10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15억원)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알짜배기 신규 사업들이 예산안에 이름을 올렸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확보 성과는 순천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사업들이 국가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는 방증”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도시의 외연 확장과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전략적인 국비 확보 활동으로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기자

고흥군 지방소멸대응기금 ‘S등급’…88억 확보

2년간 248억원…전국 2위·전남 1위

‘청년 스마트 농수축산밸리’ 등 조성

고흥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확보 경쟁에서 전국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며 지역 발전의 청신호를 켜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S등급’에 선정돼 기금 88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고흥군은 최근 2년간 총 248억원의 기

금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는 전국 88개 인구감소지역 중 2위이자 전남 도내 1위에 해당하는 역대급 성과다. 이번 평가는 사업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방식이 대폭 개선된 가운데 치러졌다. 군은 지난 7월 서면·현장 평가와 11월 대면 평가 등 엄격한 검증 과정에서 ▲투자 계획의 적절성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제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역의 강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소록도 자원 등을 활용해 청년 인구 유입과 생활 인구 확대에 중점을 둔 차별화된 전략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확보된 기금을 투입해 군은 ▲청년 인구 정착 ▲고령 인구 지원 ▲생활인구 확대 ▲연계·협력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핵심 사업으로 고흥만을 거점으로 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수축산밸리’를 조성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투자 계획을 수립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기금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주성학기자



구례군은 최근 문예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날 기념행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및 인구소멸지역 지원 확대 시행’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 소상공인 ‘지역 소멸’ 대응 한목소리

문예회관에서…표창·화합 한마당 등

구례군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9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구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제4회 소상공인의날’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지역 의회 의원, 유관 기관 단체장, 소상공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모범 소상공인 표창 수여와 화합의 한마당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및 인구소멸지역 지원 확대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했으며, 이를 통해 급격한 인구 감소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기본

소득 제도 도입과 정부 자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김종재 구례군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농어촌의 혁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기본소득과 인구소멸 대응 정책은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심장”이라며 “경영 환경 개선, 카드 수수료 지원, 이자 차액 보전, 전통시장 기반 정비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례=임종길기자

곡성군, 오늘 ‘국악교실 발표회’ 개최

곡성군은 “옥과면 곡성국악전수관에서 10일 ‘2025년 국악교실 수강생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국악교실을 통해 배움의 열정을 쏟아온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한 해의 결실을 지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는 오전 10시 장구·농악반의 힘찬 무대를 시작으로 각 분반별 수강생들의 공연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지도 강사들이 준비한 가야금 산조, 판소리 춘향가, 곡성죽동농악 실장구 등 수준 높은 축하 공연이 펼쳐져 행사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군은 올해 장구, 농악, 판소리, 한국무용, 민요, 가야금, 해금 등 7개 분야의 강좌를 운영했으며, 2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곡성=김영필기자

담양군, 노인 통계 첫 공표…맞춤형 복지 시동

호남통계청 협력 60개 항목 분석

65세 이상 35.6%…해법 모색

담양군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 구축에 나섰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역 노인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호남지방통계청과 협력해 ‘2025년 담양군 노인등록통계’를 최초로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담양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35.6%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약 20%)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이미 심화된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교한 통계 시스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통계는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복지, 건강 등 5개 부문 60개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특히 관례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핀셋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은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 해소, 사회 참여 확대, 건강 관리 체계 강화 등 중점 과제를 발굴하고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통계는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정책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체계를 강화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김한중 장성군수가 이동장터 차량 내부를 살펴보고 군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오지마을 ‘식품사막’ 이동장터로 푼다

진원면 비룻 11곳 생필품 등 배달

장성군이 마트가 없어 장보기가 힘든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장터’를 운영한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진원면 생활공유센터에서 ‘찾아가는 도란도란 장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도란도란 장터’는 인구 감소로 식료품점이 사라져 신선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식품사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찾아가는 이동장터’ 시범지구로 선정된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장성지사 등과 협력해 준비를 마쳤다.

이동 장터 차량은 진원면 학전마을 등 관내 11개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한다. 판매 품목은 라면, 음료 등 가공식품부터 각종 생필품까지 다양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구입 물품을 집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며, 유류나 계란 같은 신선식품은 이장이나 부녀회장을 통해 미리 주문하면 구매할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도란도란 장터가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운영 성과를 분석해 군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식품사막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보성군 복지부 평가 ‘대상’…전국 군 단위 유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최우수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 호평

보성군이 훌륭한 복지 안전망 구축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최고의 복지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9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민관 협력·자원 연계 분야를 통합해 심사했으며, ▲통합사례관리 실적 ▲자원 발굴 및 관리 ▲음·문·동 복지사업 지원 ▲공공·민간 협력 체계 등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평가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개 우수 기관이 선정된 가운데 보성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상을 차지했으며,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통해 ‘통합 사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역 복지 자원 발굴 및 효율적 배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모니터링 ▲솔루션 위원회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명에 사회복지공무원 등 탄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보성군 관계자는 “통합 사례 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보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대표 시책인 ‘복지600사업’을 필두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Zero)화를 목표로 삼고,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성=임병연기자